

도마 위에 오른 '자영업 손실보상'...무등록·소득축소 어쩌나?

정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본격화

권철승 "손실보상 도입 필요"...법안 발의도

무등록점포-소득 축소신고 관행 '걸림돌'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제도가 본격 도마위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보상을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손실'을 정확히 추산하기 쉽지 않아 법제화까지 난관이 많다. 지적이 나온다.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첫 출근에서 "손실보상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수준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쟁이 많겠지만 제도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손실보상과 유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의하기도 했다.

전날 정세균 총리는 "정부가 방역을 위해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제화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의 소득과 그에 따른 손실을 정확히 추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수입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무등록점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무등록점포는 그 숫자가 몇인지 정확히 추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침수피해를 입은 구례5일장에서 영업하는 점포 131개 중 113개 점포가 무등록 점포였다.

등록인정시장인 광주광역시 북구 말바우시장은 전체 점포 중 노점 비율이 74%에 달한다.

대천 대덕구 신탄진시장의 경우도 노점비율이 72%에 이른다.

이들 노점은 대부분 무등록 점포라는 게 지역 상인들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무등록점포에 대해 '소상공인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지원에서도 무등록점포는 중기부가 주관하는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복지부가 주관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은 해줄 수 없지만, 위기 가구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다는 취지다.

4차 추경에 따른 지원에서도 정부는 아예 무등록점포를 제외했다.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자영업자의 문제도 있다.

박영선 전 장관이 공릉 도깨비 시장을 찾았을 때 한 상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정부의 지원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제한이 된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금결제 위주로 거래를 했다가 전년 소득을 축소 신고 한 경우였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전통시장 등에서는 현금 위주로 거래를 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이들의 '손실'을 어디까지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제 제도의 취지는 정부의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



의식은 자영업자모임 요식업비상대책위원회(음식점업 운영자모임)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 구제대책 마련, 시간제한 해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

공인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자는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힘이 되어주는 취지에 맞게 대상과 지급 범위가 결정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등록점포나 그간 소

득을 축소했던 소상공인들도 제도적으로 규제가 적었던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들도 올상이다. 정치권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외출을 제한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소비자들의 발이 돼 주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도 예고됐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플랫폼이 직접 식재료 등을 매입해 배송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영업 활동과 겹친다는 점을 규제의 이유로 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사재기 등 혼란 없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기민하게 대응해 사회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간다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민정기자



시로 달걀 산지가격 전년 대비 45.8% 급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이유로 살처분한 산란계 수가 1천만마리를 넘어선 2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의 한 달걀 가게에 달걀이 진열돼 있다. 지난 22일 특란의 산지 가격은 10개당 1천697원으로 평년(2016~2020년) 1월에 비해 43.6%, 지난해 1월에 비해 45.8% 상승했다.

유통업계 규제 일변도...새해도 '흐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 눈앞

소비자 뿐 아니라 입점 상인도 한숨

복합쇼핑몰을 한 달에 두 번 문 닫게 하고, 이커머스 채널의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전통시장을 돕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는데, 시대착오적 법안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2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다.

14개의 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한 월 2회 의무 휴업을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을 활성화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2012년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평가

가 내려진 가운데, 복합쇼핑몰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고 쇼핑몰 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복합쇼핑몰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와 식음료 매장 등 소비자 체험 중심 공간으로 여겨진다.

또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보다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이 임대료를 내면서 영업을 하는 매장이 절반 이상이라, 매출이 많이 나오는 주말 강제로 문을 닫는다면 피해가 막심하다.

복합쇼핑몰로 상권이 커지면서 근처 중소기업과 원원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

조준한 경기과학대 교수에 따르면 대형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출점 1년 전과 1년 후의 변화를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 등으로 분석해 조사한 결과, 쇼핑몰 집적 효과로 오히려 주변 전통시장에 신규 유입되는 소비자가

11.83% 늘었다. 주변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상권의 매출도 최대 33.70% 증가했다.

전통적 유통대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들도 올상이다.

정치권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외출을 제한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소비자들의 발이 돼 주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도 예고됐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플랫폼이 직접 식재료 등을 매입해 배송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영업 활동과 겹친다는 점을 규제의 이유로 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사재기 등 혼란 없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기민하게 대응해 사회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간다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상무 지하공동구 안전관리에 인공지능 도입

정부 디지털 뉴딜 첫 사업...광주시 스마트 시스템 완비

광주 상무지구 지하공동구에 집적된 전력, 통신, 상수도 등 인공지능(AI)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광주시는 24일 "정부 디지털 뉴딜 첫 사업으로 추진한 상무지하공동구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최근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하공동구는 도시 중추시설로 도시 미관 개선과 전력, 통신, 상수도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보안을 위해 지하에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국가 중요시설이다.

하지만 지하공동구는 지상 시설물과 달리 접근이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아 재난 발생 시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능동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국비 32억5000만원을 투입, AI와 광센서, 레이저로봇,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뉴딜 기술을 활용해 전력, 통신, 상수도가 집적된 상무지하공동구에 AI와 IoT를 융합한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인 광센서를 이용해 전력선과 통신선 이상진단과 발열감지 스마트 IoT 인프라를 구축해 AI와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지하 공간의 다양한 안전정보를 종합상황실 통합관제 플랫폼에서 관리한다.

AI 기반 통합관제 플랫폼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험예측을 위한 실시간 영상과 데이터를 생산·수집·분석하고,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실시간 이상 감지, 재난·안전사고와 시설물의 노후화를 예측할 수 있다.

또 지하공동구 내 실시간 이상 감지와 신속 대응을 위해 화재, 시설물 파손, 작업자 출입, 안전장구 착용 유무, 쓰러짐, 도움 요청 등을 자동으로 식별한다.

이에 따라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설물 관리자와 소방서, 점유기관 등 유관기관에 동시에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 감시시스템은 광주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이중 설치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인력에 의한 1회 현장점검에 의존했던 것을 스마트 IoT 센서로 지하공동구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면서 조기 대응과 24시간 상시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사업에 시행사로 AI와 4차 산업 기술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전후방 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특목히 기여할 전망이다.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 "광주형 뉴딜사업에 AI와 IoT·5G·디지털트윈을 융합한 도로, 교량, 하천, 도시생활 SOC, 건물 등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감염병, 교통, 유아보육, 방범 등 시민 밀착형 생활안전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을 유치해 안전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위생·건강 챙기세요"...설맞이 마케팅 돌입

건강기능식품·위생제품 할인 행사 진행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제약기업들이 설맞이 프로모션 행사에 나섰다.

삼진제약은 2월14일까지 통합헬스케어브랜드 '위시헬스'의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공식 온라인 스토어 '마켓몬스터'에서 진행한다.

KF 마스크, 손소독제, 제균티슈, 허브차와 등 위생·건강 제품이 대상이다.

또 혈행 및 건조한 눈 개선 도움을 줄 수 있는 '오엠지-3'와 피부면역에 도움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티스' 등 건강기능식품 전 제품을 할인 가격에 선보인다.

일부 제품은 기프트 박스로 구성했다.

휴온스는 유산균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티스' 설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제품은 갱년기 기능성을 인정받은 국내 유일한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YTI'를 핵심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주요 홈쇼핑 라이브 방송에서 내년 4월까지 설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휴온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선 내달 8일까지다.

중근당건강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설 기획전을 연다.

기획전에 포함된 '락도핏' 제품을 3개 이상 구매하면 추가 할인을 제공 하는 방식이다. 네이버 스토어점 추가 시 10% 할인 쿠폰을 준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생과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행사 기획을 했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